

일반논문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와 416운동*

유해정(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이 어떻게 정치적 애도를 시작하고 이를 416운동으로 발전,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황망한 상의 과정 중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요구하는 416운동의 주제로 나서게 된 것은 참사 전과 참사 과정에서의 국가 (부)작위를 넘어 참사 이후 애도가 불가능했던 정치·사회·문화적 조건 때문이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동원했다. 416가족협의회를 구성해 416운동을 견인하고 동참해왔는데,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례없고 지속적인 재난 유가족 운동이 가능했던 건 이 조직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성했던 반별 모임과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대면의 특성을 가진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은 유대와 신뢰, 치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적 애도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참사의 사회적 구성 맥락에서 참사의 의미와 고통을 재현하는 특징적이고 다양한 운동방법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정치적 애도를 외부로 확산시켜왔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참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넘어 유가족들의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운동을 통해 형성됐다.

주요어: 세월호, 재난참사, 정치적 애도, 416운동, 미시동원맥락

1. 들어가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과제를 던졌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본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재난정치와 애도"의 5장 일부를 소폭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다. 많은 이들이 무고한 304명의 희생 앞에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주장했던 대통령의 사과와 사회적 애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가 책임을 부인하고 개인들의 일탈과 부정의로 참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됐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현상도 잇따랐다. 이에 세월호 참사는 성찰과 전환의 계기점이기 보단 갈등과 대립의 의제로 호출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후진국형' 재난도 계속됐다.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에 이어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일상과 일터를 살다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4년, 우리사회는 '416운동'에 힘입어 조금씩 진전해왔다. 재난으로는 최초로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설립돼 활동했다. 2017년 11월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로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슴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의 새 길이 열렸다. '미수습자'란 새 명명이 대변하듯 실종자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선체인양과 시신수습이 시도되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안산 시내 추모부지 확정 등을 통해 추모사업도 진일보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진행 중이다. 촛불혁명의 마중물이 되고,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의 천명과 대통령 개헌안에 '안전하게 살 권리, 재해 예방 및 위험 보호 의무'가 명기된 것 역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변화한 우리 사회의 면면들이다.

값진 사회적 성취의 중심엔 세월호 유가족, 특히 단원고 희생학생 학부모 유가족(이하 단원고 유가족)들이 서 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지난 4년 동안 쉼 없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이는 수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사회변

화를 견인해오고 있다.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에서 시작 된 416운동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승화”¹⁾시켜온 사회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단원고 유가족의 집합행동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단원고 유가족에 주목하는 이유다. 기간의 연구는 유가족의 외상경험에 집중되면서 의학적 치료나 상담지원, 사회복지적 실천과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김유진 2017; 김은미 2017; 박기목 2015; 박찬희 2015). 유가족은 사회변화의 주체이기 보단 수동적 치료대상에 한정됐다. 외상이 국가 (부)작위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증폭됐음을 주장하며 정의실현을 통한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어왔다(김명희 2015; 김왕배 2015; 김익환 외 2016). 유가족들의 주체화를 강조했지만 유가족들의 집합행동이 주된 논제이진 않았다. 유가족들의 애도를 사회운동사에 전례가 없는 행동주의 사례로 분석한 이현정의 연구(2017)는 유가족들을 주체화한 첫 고찰에 가깝다. 그는 ‘안산-노동자’라는 단원고 유가족의 삶의 배경에 기초해 이들 애도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을 분석한다.

본 연구도 유가족을 집합행동을 통한 사회운동의 적극적 행위주체로 세운다. 또한 앞선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를 통한 416운동의 내·외적 동원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내부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미시동원맥락의 관점에서 이들이 416운동에 동참하게 된 정치사회적 조건을 살피고, 인식적 해방의 과정과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와 서로를 동원하여 조직을 만들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고 이를 지속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외부로는 문화적 외상 이론에 근거해 참사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유가족들이 어떻

1) 「한겨레」. “세월호, 김근태와 만나다”. 2016.12.30.

게 참사의 의미를 재현하고 고통을 재현해 416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 견인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한편 단원고 유가족에 대한 주목은 보편적 재난 유가족에 대한 주목이기도 하다. 죽음은 삶의 종결이라는 점에서 생애 가장 중대한 사건이지만 죽음의 당사자는 더 이상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 특히 유가족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김상우 2004). 유가족은 고인과 “생물학적이고 운명적으로 연결된 존재”(김화숙 1999, 36)로서 사건의 한 가운데 선다. 장례의 주체이자 애도의 주체이며, 삶의 재편을 강요받는 주체다. 또한 이들은 재난의 직접적 피해자이면서, ‘이후’의 과정을 가장 근거리에서 깊숙이 지켜보는 목격자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유가족의 말과 행위에 무게가 실리고, 사회적 정당성과 호소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 재난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사회적 행보는 내부 갈등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오랜기간 지속되지 못했다. 관련한 사회과학적 연구역시 빈약하다. 물론 세월호 참사는 다른 재난와는 달리 재난의 특성과 체계적인 은폐와 방해가 시도된 국가폭력의 속성을 모두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희생자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응하는 평범한 유가족들의 인식의 변화와 참여의 맥락, 사회적 발현과 연대의 확산 등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재난 유가족들의 행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후 사회운동에서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및 구술자료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진행됐다. ‘416가족협의회²⁾에서 생산한 자료와 함께 416기억저장소의 팟캐스트 ‘416의

2) 본고에서 사용되는 416가족협의회라는 약칭은 2014년 5월 구성된 ‘가족대책위’와 2014년 9월 출범한 ‘가족협의회’, 2015년 1월 재구성된 ‘(사)416가족협의회’ 등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다.

목소리' 연구자가 참여한 단행본 『금요일엔 돌아오렴』(2015) 등을 주되게 활용했다. 심층면접은 416가족협의회에서 각 단위별 중책을 맡아 활동 중인 5명의 부모들이 연구 참여자로 함께해주었다. 이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는 한편 문헌 및 구술자료의 공백을 채우고 행간의 의미를 보다 명료히 해주었다.

〈표 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이름	관계	인터뷰 일시	인터뷰 소요시간	비고
기OO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	2016. 4. 19 2017. 7. 15	2시간 30분 2시간	2차례 인터뷰
환OO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	2017. 8. 5	1시간 30분	
현OO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	2017. 8. 3	2시간	
성OO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	2017. 8. 3	2시간 30분	
원OO	단원고 생존학생 부모	2017. 8. 5	3시간	

한편 연구기간은 참사 발생일로부터 2016년 10월, 특조위 강제종료 시까지로 한정했다. 이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점화되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와 맞물려 세월호 참사가 또 다른 정치·사회적 지형과 위치에 놓이는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논의

1) 정치적 애도와 416운동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될 주요한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애도란 죽음의 상실을 마주하며 남은 자가 고인을 떠나보내고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애도는 시공간을 떠나 보편적이지만 상실의 지형, 고통의 발현에 따라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사적 애도다. 가장 보편적인 애도의 형태로 이때 상실의 고통은 사적관계에 한정된다. 상(喪)의 과정 역시 개인적 관계망 하에서 수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둘째, 사회적 애도다. 상실은 사회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애도와 추모가 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喪)의 과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유명인의 운명, 참전군인의 희생, 재난에 따른 죽음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정치적 애도다. 정치적 애도는 사회적 애도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상실에 따른 명확한 정치적 요청과 이를 둘러싼 집합행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애도와 구분된다(유해정 2018, 186). 상실에 따른 슬픔과 고통을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자원으로 만드는 것은 체념과 방관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버틀러 2008, 59). 따라서 본고는 “정치적 애도를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 또는 가치의 위협·훼손으로 극도의 비통함을 경험하며 이에 저항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 응답으로 정의한다”(유해정 2018, 186). 정치적 애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죽음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본고는 진상규명에 나선 단원고 유가족의 애도를 정치적 애도로 정의한다. 이때 정치적 애도란 △세월호 참사 및 이후 과정에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간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조직 및 구조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요청하며 △새로운 가치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애도를 뜻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나타난 것을 416운동으로 정의한다(유해정 2018, 186~187). 416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월호

참사의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축과 이윤중심의 사회를 생명안전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지난 4년간 이들 유가족의 애도조차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왜곡,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애도와 416운동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유해정 2018, 187).

2) 문화적 외상이론

한편 정치적 애도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주장하고 재현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고통과 기억을 공동체화하길 요구하며, 사회적인 추모와 의례의 과정을 요구한다. 참사의 참혹함만으로 이러한 사회변화가 추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외상적 사건이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 나아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기억과 상징이 되게 하는 힘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 해당 사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인식시켜내는가에 달려있다. 이른바 참사의 사회적 구성인데, 알렉산더는 이를 '문화적 외상이론'(cultural trauma theory)으로 정립한다.

알렉산더(2007)는 트라우마 즉 외상이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재현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외상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미주장의 경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을 변화할 만큼의 외상을 입었다고 여겨질 때 문화적 외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 외상은 사건과 사건의 사회적 재현의 격차, 즉 재현이 이뤄지는 과정인 '외상과정'(trauma process)을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과 태도, 정체성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 사건의 의미를 창출하고 주장하는 수행집단이 필요하다. 행위자는 고통의 성격, 희생자의 성격, 그리고 희생자와 청중과의 관계, 책임의 귀속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주장을 통해 사건이 문화적 외상이 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재현해낸다. 문화적 외상이 사회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집단정체성 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 이 행위자의 의미주장을 듣고 동참할 청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두 번째 요소다. 이 청중들은 당대의 시민, 사회구성원들로 이들을 향한 행위자의 의미주장이 성공적일 때 외상 주장은 더욱 폭넓은 시민, 사회구성원들에게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외상과정이 발생하는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상황이다. 외상 사건을 둘러싼 상황 내에서 의미주장이 형성되고 격돌하며, 사회구성원들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단원고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의 외부적 발현은 바로 이 외상과정에 위치한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구성해내는 행위자들로, 정부와 언론의 의미주장 및 재현과 경합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정치적 애도를 통한 416운동에의 참여와 세월호 참사의 당대적, 역사적 의미를 결정짓게 된다.

3) 정치적 기회구조와 미시동원맥락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정치적 애도의 발현을 참사의 사회적 구성의 맥락에서 본다고 할 때, 유가족 내부의 정치적 애도의 동원, 참여의 맥락은 맥아담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미시동원맥락(micromobilization contexts)으로 분석한다.

맥아담(McAdam 1998)은 사회운동의 출현부터 쇠퇴가 일련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운동은 정치·사회·경제·문화와 같은 거시적

맥락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의 발전은 미시적 차원의 역동적인 작용에 달려 있는데(McAdam 1998, 127), 때문에 집합행동이 창출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함께 자원동원구조가 매우 중요하다(정철희 2003, 38). 이때 정치적 기회구조는 △도전하는 집단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지원 또는 반대의 분포 △정권의 위기 또는 정치적 지배에 대한 일반적 경쟁조건 △억압적 사회통제의 부재 또는 약화 △갑작스럽게 부과된 고통 등의 정치적 현실에서 파생한다. 그리고 제도화된 정치와 대비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로서의 사회운동의 배경이 된다(McAdam 1998, 127~128).

하지만 정치적 기회구조의 창출이 집합행동을 담보하진 않는다. 정치적 기회구조 만큼이나 미시적 정치과정의 출현과 이 둘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때 강조되는 것이 동원구조로서의 미시동원맥락이다. 동원구조란 사람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최종숙 2018, 19), 이때 미시동원맥락은 얼굴을 마주대하는 공동체로서 집합행동을 위한 동원, 참여를 창출하는 소규모 집단의 상황을 의미한다(McAdam 1998, 134). 이것의 중요성은 소규모 집단이 창조해내는 대인관계에 있다. 즉 규모나 공식화된 정도에 상관없이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집합행동에 기여한다. 우선 의식의 변화다. 맥아담은 이를 피브과 클라워드의 논의를 빌려 '인식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으로 명명했는데, △기존 제도나 체제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확신 △변화에 대한 요구가 권리라는 인식 △정치적 무기력함을 경험하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치적 효능감 등을 의미한다(McAdam 1998, 132~133).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분리되기 어렵고, 집합행동의 동기, 참여 의지를 북돋는다는 점에서 참여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집합행동에 필요한 조직 토대를 제공한다. 사회운동이 제도나 정치에 저항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 간에 강한

연대와 신뢰가 필수적인데(최종숙 2015, 45), 이때 얼굴을 마주대하는 공동체는 친밀함과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의 토대로 기능한다. 조직의 리더, 연락처, 통신수단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미시동원맥락은 사회운동에 개인이 동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자 자원이다. 셋째, '연대의 유인구조'(structures of solidarity incentives)다. 소규모 집단은 면대면 공동체라는 점에서 집합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McAdam 1998, 136).

그동안 미시동원맥락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의 출현 과정에서 미시동원맥락의 작용과 기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져왔다(김도균·이정림 2017; 정철희 1995; 최종숙 2015; McAdam, 1998).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운동사의 맥락에서 미시동원기제는 학생운동활동가 네트워크와 교회공동체(정철희 1995), 비판 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정이환 2000), 대학사회(최종숙 2015), 의식화된 지역여성모임(김도균·이정림 2017) 등에서 창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적 비판의식을 가진 모판 위에서 미시동원맥락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시동원맥락은 운동의 발현 이후 이를 계기로 형성된 작은 면대면 공동체, 소모임 등에서도 창출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부과된 고통"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직과 이에 기반 한 집합행동은 운동 초기가 아니라 운동의 전개과정에서야 비로소 면대면 소규모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집단의 사후 출현은 운동의 창출 보다는 이후 운동의 활성화와 안정성에 기여한다. 즉 운동이 지속되려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McAdam-MaCarthy-Zald 1996, 7~17; 정이환 2000, 986) 이때 미시동원맥락은 집단적 비판의식의 고양과 조직의 지속성, 결속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임승차의 방지도도 기여한다. 사람들 사이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작동함으

로써 보다 강력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집합행동에의 참여를 북돋고 참여를 안정화하는 발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유가족 인식의 형성과 특징

1) 애도 불가능한 정치사회적 조건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소식과 전원구조 뉴스를 차례로 접한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온 팽목항에서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믿지 못할 사실을 접한다. 더불어 사상 최대의 구조작업이란 언론 보도와는 달리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다. 구조, 수색에 관한 구체적, 체계적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조를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한 단원고 학부모들은 17일 자원한 13인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아름아름 알게 된 부모들이 모여 급조한 대책본부의 역할은 정부의 신속한 구조·수색 촉구, 사고 현장 감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사이의 정보공유였다. 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신속하고 책임있는 구조를 촉구한다. 18일 오전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구조작업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9일 밤, 가족들은 에어포켓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해경이 이를 알면서도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쇼'를 했음을 알게 된다. 분노한 3~400여명의 가족들은 기말 곳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청와대로 가겠다고 행진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 최초의 집합행동이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진도대교에서 끝내 회군하면서 집합행동은 정리됐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20일 오전부터

는 시신수습이 본격화되면서 대책본부 활동도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이후 대응은 안산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장례를 마친 가족을 중심으로 4월 25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가족대책위)를 구성한데 이어, 5월 6일 가족전체 회의를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를 결성한다. 그리고 7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습을 촉구한다(안산시 2016, 86). 하지만 명료한 대외적 주장과 달리 내부는 혼돈 그 자체였다. 의제의 우선순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4월 말부터 추모공원 설립, 재난안전의 날 지정 등의 안을 유가족에게 제시한 상태였다. 장례와 봉안에 불만이 많던 유가족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추모공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5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가족대책위는 추모공원,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진상규명 운동에 매진을 결정한다. 그리고 6월과 7월부터는 정치적 애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변화에는 내·외부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첫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컸다. 참사 초기만 하더라도 유가족은 참사의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사고책임은 선사에 있지만 구조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구조작업을 비판했다(가족대책위 성명서 2014.5.16). 참사현장을 목도하면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가족대책위 성명서 2014.5.16)고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가족대책위 호소문 2014.6.17)는 걸 깨달았지만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유가족들이 국회와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의와 결단을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이현정 2017, 284).³⁾ 해서 이들은 대정부 싸움보다는 국회의 조력과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요청했다. 정치적 행위로 호도되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발언이나 집회, 시위 등의 집합행동을 최대한 자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공방의 문제로 간주했다.

“아들 보내고 국회에 가보니까 아, 굉장히 변질이 됐구나. 여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든 피해를 안 보려고 하고, 당시 여당은 무조건 박근혜 편을 들고 하는 걸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여야 갈려서 싸워야할 문제인가? 아무리 유가족들이 많이 못 배웠어도 상식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왜 구조에 실패했고, 왜 그 큰 배가 침몰이 됐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해야 하는데... 저로써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환OO 씨 인터뷰)

7월 중순에 이르면 유가족들은 정부, 특히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로 청와대를 지목하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 지방선거를 전후한 여당의 방관자적 자세 등이 그 이유였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가족들은 현 체제와 정치권의 의지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

둘째, 사회적 지형 변화 역시 이들이 정치적 애도를 나선 이유였다. 일례로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참사 초기 유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정부가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⁴⁾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5월 초부터 정

3) 관련해 이현정은 참사 초기 유가족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인 신뢰”라고 표현하며, 이는 “국가체제의 수장을 국부라는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바라보도록 훈육되었던 이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남달리 크고 절대적인 한국의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영향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이현정 2017, 284).

4) 「조선일보」. “<사설> 정총리 사의가 수습공백 만들면 국민이 용서 안할 것”. 2014.4.29.

부의 유병언 몰이에 적극 동참하더니 7월 말 특별법 제정국면이 가시화되자 “이미 많은 사람이 세월호 문제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다”⁵⁾며 유가족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유가족들은 “법체계도 아랑곳 하지 않는”, “국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는 이기적인 특권층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조변화는 세월호 참사가 정권의 위기이자 보수세력의 위기로 강력히 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7.30 재·보선에서 “여당의 압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희석하는 요인으로 작용”(이선민·이상길 2015, 27)했다. 언론이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여론을 만들고 담론을 유포한다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사회분위기가 점차 진상규명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배·보상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과 잡음역시 진상규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경각심을 자극했다. 참사직후부터 보상금을 둘러싼 억측들이 떠돌았으며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싸움은 보상금 몸집을 불리려는 투쟁으로 비난받곤 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조차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⁶⁾이라는 문자를 보낼 만큼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유가족들이 ‘세금도둑’ ‘시체팔이’로 비난 받는 상황이 계속됐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과 모욕도 차츰 가시화되고 있었다.

5) 「조선일보」, “<사설> 세월호 유족 도와준다며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 2014.8.22.

6) 「한겨레」,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퍼날라 ‘파문’”. 2014.7.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645.html (검색일 2017.12.18).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것이 수용될만하고 납득 가능한 것이 사적 애도의 선결과제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제반 상황들은 유가족들의 애도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파적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이 되어갔다. 예측하지 못했던 깊은 고통을 경험하며 유가족들은 현 체제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유가족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사적 애도의 주체로만 남던가 아니면 스스로를 동원해 진상규명운동에 나서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2) 유가족에서 시민으로 확장된 인식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애도는 보편적이지만 정치적 애도의 발현은 일반적이지 않다. 정치적 애도는 기약없고 끊임없는 내적·외적 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정치적 애도 수행을 통해 자녀에게 정의롭게 살아남기를 시도한다. 자식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여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다(정원옥 2012). 스스로를 동원하는 이유다. 다수의 단원고 유가족도 그 길을 선택했다.

“자식 하나 있던 걸 잃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합동 분향소에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배우지는 못했어도 꼭 니 억울한 죽음은 내가 밝히고 너한테 가마. 솔직히 박근혜 정부가 지나 우리 애 엄마, 유가족들을 투쟁가로 만든 거죠.” (환OO 씨 인터뷰)

환 씨의 인터뷰가 웅변하듯 이들이 정치적 애도에 나선 것은 어린 자녀의 무고한 죽음 때문이었다. 보편적으로 자녀의 죽음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상실”(정혜신·진은영 2015, 61)로,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때문에 자식의 상실은 자신의 상실,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긴 극도의 절망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해경,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는데서 부모의 분노와 원통함이 더욱 커진다. 당시 일반인 승객 생존율은 69%. 반면 단원고 교사 생존율은 22%, 학생 생존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지만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죽어야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부모가 맹세하는 이유다.

두 번째, 자책과 죄의식 역시 정치적 애도를 선택한 이유였다. 자책은 모든 유형의 죽음에 대해 산자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사고 초기 자녀와 통화한 대다수 부모들이 선생님과 선장의 지시를 따르라며 놀란 자녀를 다독였는데 이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조언이 됐다. 또한 일반적인 재난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재난현장을 목격, 경험한다. 하지만 이들은 선미가 나와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직접 구조도 시도하지 못한 채 3일에 걸쳐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무기력하게 자식이 죽어가는 과정을 온전히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밖으로 뛰쳐오라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니까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 있으면 구해줄거라 생각했시유. (중략) 내가 내 자식을 죽였어유... 아빠가 판단을 잘못해갔고 애를 죽인 것 같아...” (김진철. 416 작가기록단 2015, 104-105)

세 번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피해자지만 또한 동시에 재난현장의 생생한 목격자이기도 하다. 유가족이 현장에서 목도한 것은 국가 부재와 무능이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국가는 유능한 정체라 믿어왔건만 매우 무능력하다는 것, 국가는 국민 편이라고 믿어왔지만 그러지 않다

는 것을 깨닫는다(진태원 2015, 145). “발전된 산업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지주형 2014, 29)이 깨지고,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가족대책위 호소문 2014.6.17)는 경험은 정부와 국가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자녀의 죽음과 참사 현장은 우리 사회의 허상과 부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장 명백한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유가족들은 세속적 가치만을 쫓아 일상에 매여 살았던 삶의 태도가 정치적 무관심과 방관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또한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는 난관으로 작동했음을 서서히 깨닫는다.

“내가 피해자 엄마지만 간접적인 가해자잖아. 어른인데 대한민국 문제를 목인했던 거예요. 이걸(연구자 주- 진상규명) 밝혀주려면, 그걸 하다보면 더 큰 나무가 되겠죠.” (성OO 씨 인터뷰)

“이 참사가 제 인생의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된 사건이잖아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치부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세상일거라고 정말 몰랐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비양심적인 세상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솔직히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고, 이게 내 탓인가 하는 자괴감도 있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 (중략)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음표를 던지면 내가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홍영미, 416의 목소리)

또한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수많은 재난 및 국가폭력 피해자와 교감할 기회를 가졌다.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진심어린 위로와 연대를 통해 많은 유가족이 그간 몰랐던 사회의 민낯을 보았고,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가 한창 슬픔에 젖어 있던 무렵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고맙게도 위로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나는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였고 나와 먼 얘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중략)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체 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연. 416 작가기록단 2015, 329)

“나는 테비에서만 봤죠.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노조가 데모하고, 보고만 있다가 내가 기동대에 끌려가서 맞고 그걸 경험하면서 자식 죽은 부모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내 나라가 그러는구나. 유가족들을 개 끌듯이 끌고 가서... 광화문에서 1년간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나왔겠구나, 우리처럼 당했겠구나. 내 자식 억울함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환OO 씨 인터뷰)

재난의 유일한 긍정적 측면은 참사를 통해 정부와 엘리트들이 구축해온 시스템이 결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그들 권력의 정당성이 도전받는다는데 있다(솔닛 2012). 유가족들은 참사를 통해 권력과 제도가 정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진실을 드러내야 할 책무,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 책무는 그동안 잊고 있던 시민의 권리였으며 또한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자녀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책무와 권리 안에서 정치적 애도의 원칙과 내용이 구성됐다.

한편 시민들의 촛불행동도 정치적 애도에 나서고 이를 지속하게 된 주요한 동력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무사생환을 염원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은 5월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로 전환되고 있었다. 단시간 내에 특별법 제정에 동참한 시민도 350만 명에 달했다. 지지하고 동참하는 시민이 많다는 확인은 이게 싸워

야 할 일이라는 자각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았다. 폭 넓은 사회적 애도가 '평범한'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를 북돋은 것이다.

4. 유가족 조직의 발전과 동원

1) 정치적 애도의 구심, 가족협의회

애도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자각, 제도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인식적 해방은 '안산', '단원고', '2학년', '학부모' '유가족'이라는 동일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416가족협의회의 틀 안에서 정치적 애도의 수행을 통한 경험과 논쟁을 통해 발전됐다.

2014년 5월 초 결성된 가족대책위는 2백 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또한 구성원을 일반인 희생자, 생존자로부터 확장하면서 참사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구축했다. 조직과 운영체계를 확립해 가족 내 요구되는 실질적 필요와 대정부 활동에 대응하는 종합적 피해자 조직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가족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치적 애도를 수행해나가며 416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가족대책위의 쇄신이 요구된 건 2014년 9월 17일 발생한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이하 폭행사건)때문이었다. 폭행사건은 특별법 제정 국면에서 매우 치명적 위기로 작용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여당과 보수세력이 맹공을 퍼부었다.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찬성여론이 58%,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찬성 여론이 60%대였던 것이⁷⁾ 폭행사건 이후 40%대로 떨어졌다.⁸⁾ 유가족의 도덕

7) KBS. "세월호범 다시 협상·수사권 보장" 2014.8.31.

성과 진정성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유가족들은 내부의 집중화된 권한을 민주적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의사소통 및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조직의 지향점도 명료히 했다. 이에 따라 가족대책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로 재구성됐다. 이후 한차례 조직변화는 임의단체보다는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갖는 공적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장기적 전망에 따라 사단법인화 된 것이다. 가족협의회는 2015년 1월 25일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사)416가족협의회)로 재탄생했다.⁹⁾

조직의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416가족협의회는 몇 가지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애도를 수행해왔는데 내·외부의 동원에 초점을 맞추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가족대책위 시절 유가족들은 그들의 애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흘러가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가족대책위 설립 당시 가장 중요한 의결 사항 중 하나가 "정치적 발언 배제"(안산시 2016, 86)였다. 집회 시위란 말에도 큰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 퇴진 구호에도 비판적이었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제안에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실제로 참사 1주기까지 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연대한 단체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뿐이었는데, 오롯이 세월호 문제만 다룬다는 단서 하에 연대가 성립됐다. 이는 외부의 사회정치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가족 다수에게 내면화된 '정치적' 편견이 발현됐기 때문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2921926> (검색일 2017.12.18).

8) JTBC. "수사 기소권 부여 찬성 42.8 VS 반대 42.9%". 2014.9.2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24 (검색일 2017.12.18).

9) 하지만 법인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수차례 거부되면서 2016년 1월에서야 등록절차가 완료됐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족 중심주의’로 나타났다. 416가족협의회 의 결사항은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연대, 운동의 공동행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416가족협의회는 유가족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제기될 경우 결정을 유보하고 재론을 요청해왔다. 유가족의 합의되지 않은 돌출행동에 대해서도 내부적 비판은 가할지언정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감싸 안는다. 반대로 유가족들 역시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족전체가 손해를 입거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집단에 대한 보호기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16가족협의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이 맺어준 가족이자 운명공동체란 자각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이다.

마지막 특징은 조직의 민주성과 평등성, 자율성 구축이다(김신석 2017, 10~13). 416가족협의회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가족들 간의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운동의 와해였다. 분열은 기간 정부와 가해자들이 보상과 협상을 미끼로 재난 피해자들을 가장 손쉽게 넘어뜨려왔던 방법이기도 했다. 또 분열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싸움이 장기화되고 성과가 더딜수록,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내부 운영에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와 효율적 업무분장을 꾀하고¹⁰⁾, 민주성과 평등성, 개방성을 확보해 가족협의회 운영과 활동에서 소외되는 유가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향했다. 또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는 유가족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을 창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라는 점에서 내부의 동원을 안정화, 지속화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¹⁰⁾ 가족협의회 의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신석(2017)을 참고할 것.

정치적 애도의 내용과 체계는 416가족협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외화됐지만 이것이 구현되고 실천되며 안정성을 담보한 것은 하부단위였다. 바로 반모임과 소모임이다.

2) 실천과 유대의 반(별)모임

반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참혹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임이자 416가족협의회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정치적 애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창출되는 토대다.

참사로 1반에서 10반까지, 가장 적은 반에서 18명, 가장 많은 반에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가족대책위 출범과 함께 논의와 결정, 집행의 기초단위로서 반모임이 구성되고 반대표가 선출됐다. 구성 직후 반모임과 반대표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임무는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서 제기할 내용들을 취합,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었다. 참사 초기 유가족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개진되면서 이를 공유, 논의하기 위한 기초단위로써 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또한 2014년 6월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국면에 들어서면 반은 실천의 중심단위로 부상한다. 전국 순회 서명운동 당시 반별로 담당 지역이 배분되면서 유가족들은 한 달여 간 반 단위로 전국을 돌았다. 집회시위 참여와 도보행진도 반별로 모여 참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농성은 물론 동거차도 지킴이도 반별로 당직 일정이 정해져 순환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합동분향소와 가족대기실도 매일 반별로 당직을 서는 시스템으로 3년 넘게 지켜왔다. 반이 소통과 실천의 가장 핵심 단위이다 보니 반을 중심으로 가족협의회의 일상적 결속과 참여가 강화되어온 것이다.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잖아요. 2학년으로 보면 같은 소속이지만 더 작은 단위가 10개 반이잖아요. 반별로 단합이 더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모이고 학년에서 모이고 학교로 모이고. 결속력이 2중, 3중으로 되다보니까 더 잘 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OO 씨 인터뷰)

친밀함과 유대는 반이 애도와 치유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장례 후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많이 찾은 곳은 합동분향소 내 가족대기실이였다. 이곳에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같은 반 부모들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자녀가 같은 반이었다는 건 부모들이 공유할 것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반별로 찍은 사진, 동영상은 물론, 배안에서의 마지막 시간 역시 반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마지막을 함께 더듬어 복기할 수 있다는 건, 서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자녀의 생은 물론이고 죽음마저도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들에겐 큰 치유다. 부모들이 반을 매개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서로 얼굴도 몰랐잖아요. 친구가 누구고, 친구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같은 반의 우리 **이 친구 엄마라고 하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엄마니까. 똑같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도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지부터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OO 씨 인터뷰)

416가족협의회 체계가 안정되고, 특별법 제정 이후 운동의 맹렬함이 조금 수그러지면서 반모임의 위상 역시 조금씩 변화해왔다. 초기 논의, 집행, 실천의 단위로 반모임이 부각되었다면 1주기 이후로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유가족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정보의 소통과 관계

를 유지하고 사람과 조직 간의 불만과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 반모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416가족협의회의 가교로서 기능했다.

“형제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데, 다 몰랐다가 아이들 희생돼서 만났는데 100프로 의견이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중략) 내부에 분란이 없을 순 없어요. 반대표들은 반 안에서 그런 내부적 분열이 적을 수 있도록 잘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이 지금 중요한 거죠.” (한OO 씨 인터뷰)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갈 수 있는 건, 반(학급)으로 묶여 있는 부모들의 공동체, 세월호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관계의 덕이 커요. 직장 다니느라 모임에 못나오는 부모가 있어도 서로 포용하고 연락해주고 정보도 공유해요.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김현동. 416 작가기록단, 2015: 308)

3) 치유와 연대의 소모임

반모임이 공식적인 실천과 논의의 단위이자 면대면 모임이라면 416가족협의회 내의 다양한 소모임들은 비공식적인 면대면 모임이자 자생적으로 형성됐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 애도를 수행해온 기존의 여타 유가족 집단에는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단원고 유가족의 신체, 심리, 정신 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다수 유가족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김유진 2017; 김은미 2017; 김익환 외 2016).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부가 마련한 치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이를 거부해왔다.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통함과 비통함은 약물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현재의 고통이 자녀의 상실을 넘어 정부

가 진상규명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치료보다 진상규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따라서 이들이 찾은 곳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합동분향소내 가족대기실이었다. 가족대기실은 유가족의 친밀감 및 유대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매개였다. 대기실에 모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들이 생겨났다. 416공방과 416합창단, 그리고 416극단 등이 그것이다.

“참사가 일어나고 각자 집에서 있었으면 뭐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진상규명하자, 책임자 처벌하자, 안전사회 건설하자 그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고 결속을 하는 의미에서 가족대기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는 공간이었죠. 또 나와서 심리적인 부분, 억울한 부분, 치미는 화를,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팽목항 때 이야기, 애 찾을 때 얘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 나왔고, 이런 얘기. 이걸 밖에서 못하거든요. (중략) 집에만 있지 말자. 집에서 울고 있지만 말자, 뭐라도 나와서 하자.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엄마야빠들끼리 모여서 수다라도 떨고 같이 울기라도 하자고 해서 만든 게 엄마 공방이었고...” (기OO 씨 인터뷰)

엄마공방은 2014년 가을 가족대기실 일부를 막아 만들어졌다. 잠시라도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라도 몰두할 것이 필요했던 엄마들이 함께 모여 리본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면서 엄마공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밖에선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답답한 속사정들을 토로하고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다. 반 모임을 통해서 맺게 된 관계들과는 또 다른 관심사와 고통을 공유하는 관계들이 형성됐다. 2015년 봄 새롭게 엄마공방을 시작한 주체들은 기존의 역할 이외에도 “엄마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실력을 쌓고, 투쟁을 갔다 와서 쉬는 공간”이자 “진상규명과 추모공원 등의 장기전의 요충지”로서 엄마공방의

역할을 상징했다. 이후 엄마공방을 본 따 아빠들을 위한 목공방도 만들어졌고, 이후 두 공방은 416공방으로 통합됐다.

주목할 점은 416공방의 역할이 내부적 애도, 치유적 공동체의 성격과 함께 외부로도 확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416공방은 2015년 가을부터 매년 1회-2회에 걸쳐 프리마켓 '엄마랑 함께하장'(이하 엄마하장)을 개최, 416공방이 제작한 물품들을 판매, 전시해왔다.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엄마하장은 유가족들이 보다 많은 안산시민과 교류함으로써 416운동을 널리 알리고, 화랑유원지를 추모공원 터로 알려내고자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목적 하에 수익금이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안산 취약계층에게 기부되어졌다. 엄마하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엄마하장은 안산을 대표하는 두 번째 큰 규모의 시민행사로 부상했다.

이러한 엄마하장의 성공은 유가족 내부의 결속 강화에 기여해왔다. 엄마하장을 기획, 준비하면서 엄마공방에 모이는 유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사정으로 416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엄마하장에는 참여함으로써 소원한 관계들에 물꼬를 트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중인 유가족들을 격려,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가족협의회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70-80프로가 다 여기 사람들이예요. 여기 와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열심히 진상규명하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쉬면 안 돼. 잡념이 들어오니까. 이 엄마들은 이게 약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내고 이만큼 커진 거예요. 엄마하장도 말 그대로 공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행사가 돼버린 거야. 또 모르던 부모들끼리도 서로 알게 되고, 가족협의회 행사가 있으면 지원도 나가고. 가족협의회를 떠받치는 지렛대가 된 거죠.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라니까." (현OO 씨 인터뷰)

결속을 강화하고 내·외부적 정치적 애도를 복돋는 경향은 다른 소모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416합창단은 합창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던 몇몇 유가족들이 그동안 함께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합창공연을 준비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참사 500일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416합창단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416합창단은 창단 이래 2017년 7월 현재 100회 이상 공연하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한편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6년 3월 창단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도 몇몇 엄마들이 서로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 모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극대본을 읽게 된 게 계기가 돼 창단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런 소모임들은 유가족들이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반별 모임이나 416가족협의회와는 또 다른 관계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유가족들 간의 유대와 친밀감,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반별, 416가족협의회내의 소원한 관계들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때때로 고조된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적 애도를 위한 역량을 보전하고 서로를 동원하며 조직화하는 또 하나의 원천으로 기능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외부적으로 이러한 소모임들은 문화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외연을 확장하고 416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단원과 유가족들은 416가족협의회 지붕 아래서 다양한 면대면 모임 등을 통해 함께 모의하고 맹세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식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고, 죽은 자식의 이름을 대신해 싸웠으며, 죽은 자와 함께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폭로해왔다”(정원옥 2012, 238).

5. 유가족 운동의 전략과 특징

1) 윤리적 호소를 위한 면대면 간담회

유가족들이 '평범한' 시민이었고, '정치적'인 것을 경계하고, 면대면 관계를 증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애도의 외부 확장 역시 이러한 구도를 선호할 경향이 높다. 조직이 조직을 동원하는 형태 보다는 개인이 개인의 동참을 촉진하는 운동방식의 채택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무고한 희생, 그리고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재현하고 주장해내는 것이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채택한 운동방식 중에서 시민과의 직접대면을 통해 참사를 새롭게 재현하고 비조직화된 시민의 참여를 확장시켜온 대표적인 사례다. 유가족들이 대국민 간담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2014년 9월 이후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여론이 급격히 냉각되고 언론 보도에서도 비중이 사라지면서, 당시 유가족 내부에서 '직접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서 설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 대국민 간담회가 시작됐다.

적극적인 조직과 우호적인 시민 반응으로 유가족들은 2014년 가을, 겨울에만 전국 1백여 곳에서 3만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기록집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북콘서트 형식의 간담회가 이어져 그해 상반기에만 전국 50여 곳, 1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는 차츰 일상적인 유가족들의 대외활동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는 유가족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면서도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매우 치유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정혜신·진은영 2015, 119; 김은미 2016, 92).

간담회는 보다 '평범한' 유가족이 '평범한' 시민을 만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이란 숫자가 아닌 명료한 이름과 구체적인 꿈, 고유한 세계를 가진 아이로 소환된다. 희생자가 누구인지, 이를 잃은 고통이 무엇인지 보다 명료해진다. 또한 이름을 호명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 유가족들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또한 함께 눈물 흘리며 손잡아주는 사람들을 접하며 우리가 고립돼 있지 않다는, 정치적 애도가 올바르다는 위로와 연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게 중에는 이 자리의 인연이 서로의 삶에 소중한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보니 유가족들은 수백 명이 모인 자리보다는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얼굴과 눈을 마주하며 서로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한다.

주체와 타인의 관계를 연구해 온 철학자 레비나스에 따르면 진정한 관계는 얼굴을 맞대는 관계다. "타인의 얼굴만이 나에게 윤리적 호소와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필용 2001, 47). "윤리는 봄이고 동시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226-227). 시민들은 참혹하고 비통한 유가족의 얼굴을 직접 마주함으로써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깊이 공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의 관계에 놓이게도 된다. 즉 간담회를 통한 대면접촉은 참여자들에게도 희생자의 삶을 기억해 자신의 옆 자리에 놓고,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정부의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킨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가 시민과의 상호교감 속에서 계속될 수 있었던 주요한 하나의 동력이자,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416운동에 동참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해왔다.

2) 죽음에 응답하는 자기대결적 고행

간담회가 면대면 접촉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주장하는 운동 방식이라면, 강도 높은 운동방식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절박함으로 참사의 의미를 재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운동도 전개됐다. 노숙농성,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삭발 등 시민사회운동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방식들로, 이런 양식들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보단 고행적이며 자기 대결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이시재 2004, 1). 가혹한 육체적 고행을 통해 고통의 참담함 드러내고, 진상규명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2016년 10월까지 총 3번의 집단단식을 벌였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14년 7월부터 국회와 광화문에서 진행한 단식농성이었다. 당시 단식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차례로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단식자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였다. 김 씨는 광화문에서 40일, 이후 병원에서 6일, 총 46일에 걸친 단식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몰라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엄마, 아빠 울부짖다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서 참고 버티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생매장 당했는지 꼭 밝혀내려면 저라도 끝까지 광화문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숨털만큼의 힘이라도 저에게 남겨 주시옵소서.” (단식 27일째, 김영오 씨의 기도)¹¹⁾

본인 스스로도 두렵다고 고백한 것처럼 김 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

11) 김영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 끝까지 버틸 힘은 저에게 주시옵소서”. 「경향신문」 2014.8.8.

까지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내몰았다. 김 씨의 검게 그을린 얼굴, 앙상하게 말라가는 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청와대를 오가는 걸음은, “먹지 않는 투쟁이 아니라 먹을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투쟁”(백상현 2017, 41)이었다. 김 씨의 결연한 단식은 특별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약 2만 4천명의 시민들이 동조 단식에 동참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과 항의행동도 잇따랐다.

2014년 여름, 승현 아빠 이호진 씨와 웅기 아빠 김학일 씨 등은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며 안산 단원고에서 진도 팽목항, 그리고 다시 대전까지 총 900km를 6kg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었다. 38일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2015년 1월, 수십여 명의 유가족들 역시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0일간 안산에서부터 팽목항까지 530km의 도보행진을 벌였다. 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삼보일배도 수행됐다. 2014년 9월 국회의 특별법 논의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유가족들은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로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다. 2015년 2월에는 십자가 행진을 했던 승현이네 가족이 다시 삼보일배로 팽목항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1500리를 30만 배를 하며 행진했다.

유가족들이 고행적인 운동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앞서 설명했듯 유가족들은 그들의 애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때문에 참사 초기 유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내·외부적으로 ‘정치적’ 논란 없이 수용되면서도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여야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애도의 ‘중립성’과 진정성을 전달해 세월호 참사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고자 했다.

두 번째, 가진 자원이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절박함의 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많지 않다. 유가족 대부분은 안산에 거주하던 평범한 노동계급이었다. 소위 백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유가족들이 처한 사회정치적 지형도 열악했다. 해서 예은아빠 유경근 씨는 2016년 8월 정부의 특조위 해체 방침에 반대하는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를 “사생결단식”이라고 표현했다. 국회도, 언론도, 국민도 무관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말을 차단당한 사람들이 사회에 온 몸으로 ‘말’을 걸려는 행위”로,¹²⁾ 몸의 도구화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죽고 부모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고행을 선택한 가능성이 있다(정혜신·진은영 2015, 71). “4월 16일 이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가족협의회 기자회견문 2014.8.23) 유가족들은 스스로 몸을 학대 수준으로 혹사시킴으로서 당시의 고통을 체험하며, 자식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고통을 사회적으로 재현하려 한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자녀에게 ‘당신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가족협의회 기자회견문 2014.7.14)는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다.

“아프다고 하면 예전에는 쉬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수 있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여러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일은 해보고 있고.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명순, 416의 목소리)

12) 류은숙.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인권오름」 363호 2013.9.25.

http://cast.jinbo.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1&nid=71579&page=47 (검색일 2018.3.26)

3)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난사에 기록될 만큼 이례적이다.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보상금 문제였다. 일부 언론은 참사 당일 저녁부터 보험내역과 보상금 액수에 관한 보도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사고 다음날 오전부터 보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다뤄왔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재난에서 예상 보상금 액수를 다룬 기사가 재난현장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사건 첫날부터 보도돼왔다. 또한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고액 보상을 노린 '시체장사', '시체팔이'로 매도되곤 했다. 세월호 참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유가족들 역시 이런 사회 분위기에 옥죄여있었다.

“우리는 나라하고 싸우는 건데, 온통 거짓말만 한 나라하고 싸우는 건데, 사람들은 한창 유병언 얘기만 하더니 이제는 돈 얘기만 해요. (중략) 사람들이 자식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식 아니라고 돈이랑 자식이랑 어떻게 바꿀까 싶고...” (전민주. 416 작가기록단 2015, 83)

배·보상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2015년 봄에 발생했다. 2015년 3월 말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특조위 독립성 훼손을 골자로 한 해수부 시행령안에 분노한 가족협의회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선포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요구에 응하기보단 배·보상 지급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신문

들이 정부가 거액을 배상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¹³⁾ 유가족들은 시행령안 폐기와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한다. 또한 자녀의 영정을 들고 소복을 입고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행진을 한다.

“우리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짓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돈을 흔들다니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가족협의회 기자회견문 2015.4.6)

이후 가족협의회는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운진 해운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희생자 111세대 등 총 131가구가 동참했다.¹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액수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자체가 고통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즉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및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 이 사회의 부당한 대응 등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¹⁵⁾ 강력한

13)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관련 보도를 통해 △일일수익이 일용 노동자 수준이며 △위자료 역시 교통사고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배·보상이 많지 않고 △심의회 논의 및 결정과정에서 유가족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14) 우선 청구금액은 희생자 가구당 1억으로 정했는데,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 「미디어스」. “정부, 기업에 참사 책임 묻겠다... 세월호 유가족, 소송 청구”. 2015.9.23.

국가책임성의 환기다. 또한 무고한 죽음과 유가족의 고통은 절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함을 보여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치적 애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생명존엄임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유가족은 매우 다양하고 이례적인 방법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환기하며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재현해냈다. 또한 무고한 죽음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의 416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해왔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의 416운동에의 동참은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넘어 이후 발현된 유가족의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적 애도 위에서 구축되고 실현돼왔다(유해정 2018).

6. 나가며

본 연구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애도가 어떻게 정치적 애도를 통한 416운동으로 발현, 전개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원고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를 통해 재난참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와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참사 유가족들의 애도에 대한 연구 역시 척박한 것이 학문적 현실이다.

단원고 유가족이 황망한 상의 과정 중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요구하는 416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은 참사 전과 참사 과정에서 국가(부)작위를 넘어 참사 이후 애도가 불가능했던 정치·사회·문화적 조건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당시의 정권과 보수세력의 취약성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애도는 두려운 것이 되었고, 사회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8> (검색일 2017.12.18).

이들의 애도에 대한 추방을 시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동원했다. 416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고 416운동을 견인하고 동참해 왔는데,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례없고 지속적인 유가족 운동이 가능했던 건 416가족협의회의 운영 방식 이외에도 이 조직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성했던 반별 모임과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면대면 소모임들은 유가족의 친밀감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들의 정치적 애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주었다. 또한 외부적으로 단원고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를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동하기도 했다.

한편 애도가 불가능한 정치사회적 조건, 그리고 정치적 애도의 수행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사회와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인식적 해방을 경험해왔다. 이 경험은 무고한 어린 자녀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한 부모의 책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유가족들의 책무를 세상과 역사 속에서의 시민의 책무로 한층 신장 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단원고 유가족은 특징적이고 다양한 운동방법들을 고안, 실천하며 정치적 애도를 외부로 확산시켜 오기도 했다. 유가족은 자기고행적이며, 얼굴을 마주대하며, 돈이 아닌 진상구명을 선택하는 운동방식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이가 누구인지, 참사가 초래한 고통이 무엇인지, 이 과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주장하며 재현해내며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켜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와 동참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넘어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운동을 통해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단원고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 수행을 통한 416운동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한다.

(집수 2018. 4. 5. 심사완료 5. 31. 게재확정 2018. 11. 18)

참고문헌

- 416작가기록단. 2015.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 김도균·이정림. 2017. “지역생활협동조합의 동원과 성장”. 『환경사회학연구 ECO』. 21(2). 69-107쪽.
- 김상우. 2004.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일상적 삶의 위기와 재편”.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2015. “고통의 의료화 : 세월호 트라우마 담론에 대한 실재론적 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38. 225-245쪽.
- 김신석. 2017. “사회적 사건 기록화를 위한 기록개념의 재해석: 416가족협의회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왕배. 2015.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7. 5-24쪽.
- 김유진. 2017. “세월호 재난 유가족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 2017.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연구”. 백석대 기독교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익환 외. 20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생활실태 및 심리상태에 따른 공동체 욕구조사』. 경기연구원.
- 김화숙. 1999.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버틀러, 주디스(양효실 역). 2008.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 출판부.
- 박기목. 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 학회』 15(9). 134-145쪽.
- 박찬희. 2015. “세월호 희생 학부모의 심리경험”. 국제신학대학원 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상현. 2017.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위고.

- 솔닛, 레베카 (정해영 역). 2012. 『이 폐허를 응시하라』. 팬타그램.
- 안산시. 2016.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백서: 부록』.
- 안필용. 2001. "정치적 관계에서 자아와 타자에 관한 연구: 레비나스의 '윤리적 관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알렉산더, C. 제프리 (박선웅 역).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한울.
- 유해정. 2018. "정치적 애도를 통한 삶의 재건: 세월호 참사의 시민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181-220쪽.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언론과 사회』. 23(4). 5-66쪽.
- 이시재. 2004. "'삼보일배'와 한국의 사회운동". 『사회과학연구』. 20. 5-20쪽.
- 이현정. 2017.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김미경 엮음. 『침몰하는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울.
- 정이환. 2000. "주변 노동자의 동원화, 조직화". 『한국사회학』. 34. 981-1006쪽.
- 정원옥. 2012. "의문사 유가족의 애도전략". 『민주주의와 인권』. 12(3). 235-268쪽.
- 정혜신·진은영. 2015.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창비.
- 정철희. 2003. 『한국 시민사회의 궤적: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동학』. 아르케.
- _____.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가을호. 501-532쪽.
- 지주형. 2014.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경제와 사회』. 104. 14-55쪽.
- 진태원. 2015. "세월호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평택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131-154쪽.
- 최종숙. 2018. "항쟁의 시대 1987년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고립". <자료집: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을 생각한다>. 16-27쪽.
- _____. 2015. "시민운동단체 활동가 형성과정의 변화와 오늘날의 재생산 위기". 『민주주의와 인권』. 15(2). 39-73쪽.
- 「경향신문」, 「미디어스」, 「인권오름」, 「조선일보」, 「한겨레」, KBS,

JTBC.

416가족협의회 기자회견문, 성명서, 호소문 등.

416기억저장소. 2016-2017.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McAdam, Doug. 1988. "Micromobilization Contexts and Recruitment to Activism."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pp.125-154.

McAdam, Doug. McCarthy, John D. Zald, Mayer N.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The political condolences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ho Ferry disaster and 416 Movement.

Yu, hae jeong(Sungkonghoe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e condolences were shaped, organized and socially revealed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ho Ferry disaster who had had their sons and daughters from Danwon High School. The bereaved families put themselves forward in the middle of the precipitous funeral process as a key player in the 416 Movement, which was organized to call for fact-finding and for building a safe society. This was because they realized the (non)feasance by the government in dealing with disasters, along with the politico-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act of offering condolences was not made possible.

They organized themselves in order to reveal the truth behind the death and to realize justice. The political condolences by the bereaved families were actualized through the 416 Families Council. However, it was small groups including meetings by school class, 416 Handicraft Workshop that developed and sustained the council itself.

In addition, with a view to socially spreading the political condolences, they have constructed social solidarity and organized for citizen participation by creating and practicing a variety of unprecedented and unique methods of movement. Through this, the political condolences, which continued over the past four years, are calling for responsibilities to change the present, to mourn and remember, and to transform the future.

key word: Sewol-ho, disaster, political condolences, 416 Movement, Micromobilization Contexts